

# 전남도교육감 후보 주요 이슈별 정책비교

#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반대”… 비평준화 전환 ‘뜨거운 감자’



김경택



## 장만채



## 신태학



윤기선



국영표



서기남



김 장 환

질문내용								
번호	제목	내용	방법	방법	방법	방법		
1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시기	지자체 지원 조례제정 촉구해 2011년부터 초·중·고교 전면 실시하겠다.	2011년까지 농산어촌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2년에는 모든 학교 실시하겠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은 즉시 시행하고, 고교생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임기내에 유·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	예산 때문에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실시는 어렵다.	임기내에 유·초·중·고의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임기내에 초·중·고 모든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2	일제고사 실시에 대한 의견	찬성하지만, 공개는 반대다. 학생의 평가·진단·학습동기 유발 효과 있다.	줄세우기식 일제고사는 반대한다.	필요하지만, 학교 서열화나 시험 위주의 수업은 막아야 한다.	교육을 평가하기 위해선 필요하다. 다만 줄세우기식은 안된다.	교육의 횡일화다.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는 찬성하지만, 서열화는 안된다.	학업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이나, 성적 공개는 반대다.
3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우수교사 농촌 배치·방과후 교실 특성화·지역에 맞는 교육 개발하겠다.	원인은 사회경제적 기반 때문이다. 국가지원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낙후된 전남교육의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정부의 지원정책을 유도해야 한다.	핵심은 교사다. 유능한 교사를 농촌에 근무토록 하고, 우대하겠다.	농촌 학생이 가진 장점도 많다.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사를 배치하겠다.	영어와 수학처럼 개인차가 큰 과목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발굴해 도시와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을 해야한다.
4	복포 등 비평준화 전환 방안	평준화 유지돼야 한다. 현 상태에서 평준화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평준화가 해제되면 초5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없다.	평준화 이후 실력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 만큼 비평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평준화는 유지하되 비선후 '기피 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평준화 해야 한다. 경쟁력과 다양한 개선의 전통 평준화가 몰락했기 때문이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학교별로 우수학생에 대한 선발권 등을 검토하겠다.	비평준화 희귀에는 반대하며, 우수학생 유출은 특목고 설립으로 막겠다.
5	야간자율학습 찬반 여부	부분적으로 찬성한다.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받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선택에 맡겨야 하며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심야자를 학습은 폐지돼야 한다.	사교육 기회가 없는 전남에서 야간자율학습은 시행될 수 밖에 없다.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없애야 한다.	강제적 의무는 안된다. 학생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강제적인 실시는 반대이며,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완전 폐지는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 수도 있다. 학생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6	전남의 교사수 감소 대책	학습권 침해다. 법 소송 등을 통해 기존 수준으로 복원토록 하겠다.	전남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 우선 자체적으로 정원외 강사 등을 배치하겠다.	단순한 학생수 대비 교사수 배정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MB정부의 교육망치기 작전 중 최고 정책이다. 개선돼야 한다.	전남에 대한 푸대접이다. 교육 소외지역 전남은 오히려 교사수가 증원돼야 한다.	부족교사는 기간제로 총원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 교부금 배정이 필요하다.	정부에 도서벽지형 특별 배정 기준을 요구해 교사수 감소를 막아야 한다.
7	축소되는 예체능 교육 대책	방과후 특성화 교실과 겸임교사제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	1인 1악기, 1인 1운동 등 예체능 교육을 강화해 조화로운 성장이 되도록 하겠다.	지역의 문화·예술 인력을 활용해 1인 1악기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예체능 교육은 인성·체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절대로 축소되면 안된다. 전인적 인간 육성을 위해 오히려 늘려야 한다.	예체능 과목에 대한 내신강화 등을 통해 예체능 과목을 유지토록 하겠다.	아직 예체능 축소현상은 없으나, 장학지도 등을 통해 사전 대책을 마련하겠다.
8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감 주도의 공모제일 경우에만 찬성한다.	내부형과 개방형 교장 공모제가 확대돼야만 본래 취지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초기부터 50%로 확대한 것은 성급하다. 내부형보다는 초빙형으로 해야한다.	찬성한다. 다만 초빙형보다는 내부형이나 공개형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방·초빙·내부형을 적절히 안배하고, 자격시험으로 임명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찬성이다. 다만 현 50% 추진은 성급한 면이 있다. 점진적으로 개야 한다.
9	전교조 명단 공개	반대한다. 가입교사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교원의 노조가입은 업무 외적인 개인정보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반대한다.	반대한다. 국회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학부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위배되는 행동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교원단체는 교육발전을 위한 중요 파트너다. 무조건적 명단공개는 안된다.
10	사교육 경감 대책	방과 후 교실과 e-러닝 수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	백야이 무효일 만큼 어려운 과제다. 공교육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초·기본학력 지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	전남교육감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양질의 공교육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방과후 학교 개인별 맞춤교육·우수교사 우대 등으로 공교육이 회복돼야 한다.	방과후 학교 지원, 기숙고·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등이 활성화 돼야 한다.
11	수업의 질 활성화 방안	투명한 인사와 교권회복·잡무제거 등으로 교육 능력 향상이 끌겠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을 높여야 한다.	수석·수업선도교사제·교과연구회의 수업공개 등을 통해 교사의 자질을 높이겠다.	주입식 교육을 털어내고, 교실혁신을 통해 학습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예산 타령에 앞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한뜻으로 교육에 옮기해야 한다.	교원 잠무 경감·특별연구교사 육성 등을 통해 교실수업을 개선해야 한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이 우선돼야 한다.
12	교육비리 근절 대책	연 단위 단가입찰, 흠파이지 신문고란 설치, 윤리강령 등을 마련하겠다.	전남의 내부청렴도는 최하위다. 도민참여형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	교육장·학교장 공모제를 추진하고, 비리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인사가 비리의 근원이다. 위원회를 결성, 인사권을 도민에게 반납하겠다.	철저한 감사제도와 비리자 추방 등 엄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감사관제와 감사관 외부 임용제를 도입하겠다.	내부청렴 윤리교육 강화·민간 참여 감사제·신문고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
13	교원 성과급 배분 방식	반대한다.	교사들의 협동정신을 약화시켜 갈등만 키우는 정책이다. 재검토 돼야 한다.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학교평가나 학교별 성과급 차등 지급에 따른 배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교원 성과급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배분 기준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제도적 운영 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교원 성과급 배분 과정에서 교원들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14	교원 평가제 시행	반대한다.	필요하다. 다만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국회의 협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수업개선을 위해 필요하며, 다만 교원이 과도하게 평가를 의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 각종 부작용을 차단할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교사의 나태를 막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다만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찬성한다. 다만 연 4회 공개수업·초 4년생 교사 평가 등 미비점은 보완돼야 한다.	동의한다. 다만 공정한 평가·등급·서열화 금지 등이 실행돼야 한다.
15	학교 폭력 근절 대책	CC-TV설치, 목회자 활용한 상담실 등 지원하겠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존중과 배려가 있는 학교 문화를 형성토록 하겠다.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학교와 가정의 연계를 강화하겠다.	월 1회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성교육에 집중토록	조폭 등과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고 교장직속 대책반을 만들어야 한다.	조기발견 및 부적응 학생의 지도와 예방을 위한 센터를 설립토록 하겠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보호 인프라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
16	학원교습시간 제한(밤 10시)	반대한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학생의 수면·휴식시간 확보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심야수강은 효율성 측면이나 창의적 인재 양상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미봉책이다. 공교육만으로 진학·진로가 가능하면 가라고 해도 안간다.	제한이 마땅하다. 학생의 가장 훌륭한 심신의 교육장은 가정이다.	제한보다는 현 교습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7	전국 최저 학력 향상 대책	교사 열정 풀릴 수 있는 정책 마련하고, 학습권 회복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연수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교권을 회복시키겠다.	교원 1인당 연 30시간 이상 의무 연수제 정착과 교원 잡무 경감 등을 마련하겠다.	결국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실력을 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력증진 예산 300% 증액·교육감 직속 학력평가 분석팀 등을 운영하겠다.	예방·진단·관리시스템과 교장·교감·교사 공동책임제·학력증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18	학습부진학생 대책	학생 눈높이 교육하고, 개인 창의력 회복 적성교육 마련하겠다.	심리학습 클리닉을 운영하고,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	1대 1책임지도제 실시와 성과를 거둔 교원 승진·전보시 우대하겠다.	개인별 전문상담을 통해 학습부진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도가 최선이다.	학교별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 보조원을 배치하겠다.	기초학습 부진자 제로화를 통해 단 학년의 낙오학생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19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반대한다. 학교를 지역사회 공공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돌봄·전원학교 등 작은 학교의 성공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통폐합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초등학교는 1면 1교가 존치돼야 하며, 중·고교는 적정규모로 통합해야 한다.	폐교대신 초·중 통합학교나 중·고 통합학교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지역의 학교들은 지역민의 구심점이다. 통폐합은 안된다.	초·중학교는 1면 1학교 원칙을 유지하되, 중학교는 실정에 따라 통합하겠다.	소규모 학교 비율은 42%로 신중해야 한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노력이 필요하다.
20	지자체 교육재원 확보 방안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책을 확대해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	전남도청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고, 현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하겠다.	지자체별로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자체·기업·향우 등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모으는 마케팅 교육감이 되겠다.	지자체장과 정례적인 교육회동 기구를 마련하겠다.	시·군 발전협의회를 조례화해 교육재원을 확보해 가는 칭구로 삼겠다.	정부·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교육예산을 늘려가도록 하겠다.